

# 식량자급 최후보루, 쌀마저 흔들리나

### 자급률 45.8%...쌀 제외하면 10.2% 불과 서삼석 “정부, 지속적 쌀 수매비축 확대 필요”

지난 5년 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 다시피 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2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2015년-2020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8.2%p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뜰이나 열악한 식량자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20년 식량자급률은 45.8%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2%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 예측'이 시장에 쌀 가격 하락 시그널로 작용해 식량자급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 톤으로



2020년 351만 톤 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쌀 가격 유지와 식량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선제적 시장격리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황이다.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예

상)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2021년 쌀 예상 생산량이 농식품부가 추정한 쌀 수요량 357만 톤-361만 톤보다 22만 톤-26만 톤 가량 더 많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5.7%-6.8% 범위에서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2011년-2021년 9월)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의 139만 톤이다. 그러나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재고는 15만 톤으로 2017년의 9분의 1수준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 따를 경우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 톤-80만 톤이 된다. 하지만 국산 쌀 재고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은 10년간 4차례(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뿐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의 농민들은 2020년산 쌀 생산은 태풍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 예상' 발표가 국내산 쌀이 상시 과잉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원팀’ 숙제 푼 이재명, 민생행보 본격화

### 관악구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원팀’ 숙제를 털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돌입했다.

경선 경쟁 주자들에게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일 회동을 통해 당내 및 당청 통합과 화해의 토대를 일궈냈다고 판단, 대선후보 선출 17일 만에 첫발을 댄 것이다.

이를 전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후보는 전일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절차도 마쳤다.

출발점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신원시장)이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약속하는 정책 홍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시장 중앙통로를 따라 떡집과 과일가게 등 점포들을 두루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시장 인근에 있던 지지자들도 대거 몰려나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이 후보는 과일 상점에서 단감 한 봉치를 사면서 현금 대신 ‘온누리 상품권’을 내기도 했다.

첫 민생 행보지로 관악구의 전통시장을 찾은 것을 두고는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과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곳은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지역구여서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정 의원이도 참석, 이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지지자를 호소

했다. 이 후보의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과 유기홍·진성준·홍정민 의원이도 동참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치의 본령은 먹고사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첫 행선지로 잡았다”며 “지역화해 확

산이라는 이 후보의 정책을 강조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시장 한켠에서 전국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지역화해를 주제로 간담회도 했다. /연합뉴스

## ‘DJ 사찰보고서’ 정부가 매입했다

### 민간 경매시장 나오기 전 국가기록원 매입

민간 경매업체가 보유하던 전두환 신군부의 ‘김대중(DJ) 사찰보고서’를 정부가 매입해 보존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최근 민간 경매시장에 나온 ‘DJ 사찰

보고서’를 매입했다. 해당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 건강상태, 가족신상, 재산현황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민간 경매업체를 통해 지난 달 온라인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다. 해당 문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 최

고정보기관인 안기부를 통해 유력 야당 정치인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어 만약 ‘DJ 사찰보고서’가 민간경매로 처분될 경우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손실될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간 경매시장에 나온 DJ보고서를 국가가 매입해 보존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신군부가 김대중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문건

이 처음 공개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국가가 보존하고 아픈 역사를 증거로 남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건을 보존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었다. 이 의원은 “DJ보고서는 신군부 독재권력의 DJ 사찰을 증명하는 귀중한 역사적 증거”라며 “대정부질문에서의 국가기록 제안에 발 빠르게 호응해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여의도 클릭

### 서동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7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마저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교부금 총액은 국내총생산(GDP) 1.1%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확보된 예산은 대학 경성비, 교육·연구 발전 등을 위한 보통교부금과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교부금으



로 구분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부실·한계 대학에 무분별한 재정 지원을 막는 내용도 담았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국가재정지원 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대학,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기관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지 않는 대학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있다”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소병철 ‘순천만 교량교’ 예산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순천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사업 해결의 물꼬를 텃다.

소 의원은 지난 2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안전하고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해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현재 동 사업이 재난안전특고 대상사업으로 제기된 만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배정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순천만 교량교는 준공 후 44년이 경과



한 노후교량으로 2019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임시 가교가 설치돼 통행은 하고 있으나,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소 의원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남과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끝까지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